북/한/경/제/연/구/협/의/회

‘담대한 구상’과 북한의 반응

남북관계가 좀처럼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긴장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담대한 구상’으로 불리는 대북정책의 일단(경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번에 발표된 ‘담대한 구상’을 즉각 거부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의 말을 서슴지 않고,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인 도발마저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분간 남북간의 극적인 화해와 협상의 계기 마련은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북한은 우리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어떤 측면에서 좀 더 정책적 숙고를 거듭해야 할까? 그리고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의 긴장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의 한반도정세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하여 이번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서는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및 전성훈 경민대 겸임교수를 모시고 현재와 가까운 장래의 남북관계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번 토론은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께서 사회를 맡아 전체적인 진행을 주관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번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세 분의 동의를 얻어 간단히 정리하여 제공한다.

일시 및 장소

2022년 8월 19일(금) 오전 10시, CEO SUITE

사회

조동호(이화여대)

대담자

이상현(세종연구소), 전성훈(경민대)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



조동호: 오늘 좌담회의 주제는 '담대한 구상'과 북한의 반응이다. 지난 광복절 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이 매우 거친 표현으로 비판적인 담화를 발표하였다. 최근 북한의 대남 발언들을 살펴보면, 지난 7월 27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일 기념행사에서 한국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고, 8월 10일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남한으로부터 온 대북전단을 코로나19의 유입경로로 지목하였다. 며칠 전에는 순항미사일 발사도 있었다. 비록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졌다. 먼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배경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와 연관하여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장단점을 북한의 관점에서 그리고 객관적 관점에서 분석했으면 좋겠다. 또한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라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겠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듣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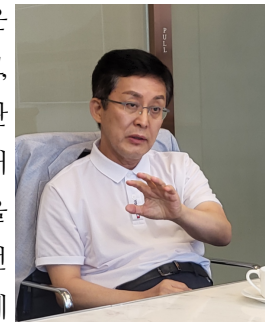
우선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도 언급하고 있다. 이를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북한이 현재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시는지 궁금하다.



이상현: 북한은 하노이 회담을 끝으로 남한에 대한 기대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한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기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미온적인 것에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소위 말하는 '임팩트'가 없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담겨 있지 않고, 북한이 경축사에 어떻게 호응할지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발표를 "Old wine in a new

bottle"이라고 표현하며 '담대한' 구상으로 평가받으려면, 예를 들면 대북제재를 모두 풀어서 북한이 국제 경쟁의 냉혹한 현실에 노출되게끔 해보는 정도로 북한에 솔깃한 제안이 되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북한의 반응과 의도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북한은 한국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서로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간다." 식으로 남북관계를 정리한 것 같다.



전성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노이 회담 후 북한은 남한에 대한 기대를 접었고, 지속적으로 남한을 비난해 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된다는 입장은 진보, 보수를 떠나 역대 정부 모두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도 어찌 됐든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다른 새로운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우리는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어떠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남한을 대등한 상대로 보지 않은 지 오래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시기의 남북관계를 상명하복이라는 우리말에 빗대어서 북한이 명령하고 남한이 복종한다는 '북명남복'으로 설명한 바 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정부를 마주해서 상대하기에는 격이 떨어지는 상대로 보고 있다. 북한의 모든 중요한 대남 입장이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게 작금의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고, 이것이 이번 담화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남한은 북한에 비핵화를 거론할 자격과 위치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상관없이 북한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사실 김일성 시대부터 시작해 김정일, 김정은 시대까지 북한은 핵문제는 미국과 거래해야 할 이슈라고 여겨 남한을 계속해서 배제해 왔다. 이러한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이 조금씩 조금씩 먹혀들기 시작하면서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은 남한과 미국의 양보를 통해 핵개발을 진전시키며 자기들의 입장을 관철해 왔다. 따뜻한 햇살에 얼음이 녹아 호수가 되고 호수의 물이 넘쳐 한국이 안보수해를

당할 위기에 처한 것과 같다. 2017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고 선언한 이후, 북한의 핵보유는 기정사실화되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남한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 제일 눈에 띄는 문구는 '국체'다. 핵이 국체라는 뜻이다. 국체라는 표현은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30년 동안 쓰지 않았던 새로운 표현이다. 이는 핵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자체라는 얘기로 풀이된다. 즉, 북한에 있어 비핵화는 자국을 제거하려는 시도와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다. 물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전혀 생소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며 과거의 입장과 달라진 것도 없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에 새로운 제안을 함으로써 그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기대를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북제안은 북한의 입장과 심경을 바꾸는 데 있어서 효과가 없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지난 7월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이 나면 선제적 핵공격으로 희생을 최소화하여 조기에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한 바 있다. 북한은 핵보유로 체제의 생존이 보장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안전보장 요구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요구 등은 북한이 지난 30여 년 동안 사용해온 협상술이고 선전수단일 뿐이다. 다만, 북한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내부적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외부의 접근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경협문제에 대해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서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우리끼리 조용히 살겠다'는 입장인데, 자꾸만 외부에서 자극을 하면 신경이 쓰이고 다소 위협감도 느끼게 되는 게 현재 북한 지도부의 인식인 것 같다.

'담대한 구상'에 대한 평가

조동호: 북한의 의도와 이번 '담대한 구상'의 미비점을 자연스레 연결하며 말씀을 나누어 보겠다. 전성훈 교수님께서 북한이 한국을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격이 맞지

않는 관계로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북한이 한국을 격이 맞지 않다고 여기더라도 필요하다면 한국의 제안에 호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북한의 입장에서 '담대한 구상'이 어떻게 평가되는 것으로 보시나?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 북한은 남한을 절대 상대하지 않겠다고도 하였는데, 과연 그럴까? 북한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린다.

전성훈: '담대한 구상'이 '비핵·개방·3000' 등 과거 정부와의 구상과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기본적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노태우 정부 이후 정도와 순서서의 차이가 있을 뿐 보수 및 진보 정부의 공통적인 기조였다. 지금의 '담대한 구상'도 결국은 비핵화를 전제하여 구체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역대 정부의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의 핵문제를 엮어 가지고 남북관계를 풀어 보겠다든가, 남북관계를 푸는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지금까지의 기본 전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도 우리가 성심껏 지원한다면 받을 용의가 있겠지만 그것이 비핵화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맞닥뜨린 것이다.

조동호: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에서도 '담대한 구상'이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며 '비핵화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 경축사에 나왔던 경제협력의 내용뿐 아니라 미발표된 정치·군사적 정책에 대해서도 모두 비판적인 것인가? 혹은 경제협력의 내용은 마음에 들지만, '비핵화를 취한다면'이라며 비핵화를 전제하는 지점에서 비판적인 것인가?

이상현: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문도 분명 고려대상일 테지만, 그보다 지금 모든 관심이 체제의 안전 및 생존 보장에 쏠려 있다고 분석된다. 즉, 북한이 지속적으로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소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포기'이다. 아마 아프간 사태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굳혔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체제의 안전 그리고 김정은 유일지도체제의 확립을 원할 텐데, 비핵·개방·3000과 이번에 발표된 경제협력 5대 사업은 체제 생존에는 못 미치는 경제적인 보상을 가지고 핵을 포기시키려

는 발상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내걸고 있는 비핵화의 조건들이 전혀 격이 맞지 않는 것이다.

핵을 가지고 체제의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북한의 입장은 오래 전부터 일관되어 있었으며, 최근 김여정 부부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등을 통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대북 적대시 정책이란 정치적 측면에서는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여 체제 동요를 중지하고,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정전 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 해제로 북한 스스로 자력갱생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진전은 없이 자꾸 지엽적인 경제적 보상으로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오겠다는 제안은 북한으로서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체제 보장은 한국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안을 내놓든 기본적으로 "우리의 체제 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주제넘게 나서지 마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라 본다.

조동호: 사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도 정확히 그러한 표현이 있었다. 이번에 북한은 핵을 '국체'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만큼 핵은 북한에게 있어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핵을 남한 입장에서는 '줘도 그만이고 안줘도 그만인 문제'인 경제협력과 바꾸자고 하니 본질적으로 성사되기 어려운 거래인 것이다. '담대한 구상'에 대한 평가 중 기대에 못 미치는 데에서 오는 실망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경제분야보다 정치, 군사 분야를 먼저 혹은 함께 발표했어야 것일까? 미국 국무부의 다소 원론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상현: 정치, 군사 부문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마 미국과의 조율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는 아직 조율 중이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정부가 준비한 군사 안보부문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짐작건대 군사 안보에서는 틀림없이 한미조율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담대한 구상'이 지금 일부만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의 설명 자료를 보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에 따른 경제지원협력 방안을 우선 발표하고, 비핵화 조치, 경제지원협력, 군사적 신뢰 등을 포괄하는 단계별 추진 계획과 최종 상태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계획은 향후 북한의 반응을 보아 가며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고 한다.

이번에 '담대한 구상'의 전모가 밝혀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군사 안보분야까지 모두 밝혀져야 총체적으로 이해 및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분야만 먼저 발표한 이유는 아마 어느 수위까지 발표해야 할지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고민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제재를 해제하면 국제적 흐름에 거스르는 것이고 국내 언론에서도 북한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제재 해제부터 하는 것이 맞냐는 비판이 나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성훈: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군사 안보, 경제의 패키지로 접근하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협력을 먼저 하고 나서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정치, 군사를 지금 먼저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핵심은 북한정권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대북정책을 짜는 일이다.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북한에 접근하는 구상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지혜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초기 단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단계별 접근법을 구상했지만, 종착역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비핵화 단계를 시작함으로써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최종 단계가 핵 포기이고 그것이 언제이냐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패키지 합의가 되어야 첫 단계를 이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중간 단계 및 최종 단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단은 시작 단계만 하는 소위 '출구 없는 터널'은 상당히 위험하다. 터널은 출구가 보여야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만 난처해지는 결과로 귀결된다.

또한 북한의 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과거와는 논의의 맥락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소련이 붕괴되던 시절과 달리 지금의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체제 전환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환경이다. 미국은 '철저한 중앙집권하에 핵을 통제하는 북한'을 '체제 전환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핵통제력이 상실되는 북한'보다 선호할 것이다. 비록 독재체제일지라도 핵을 통제하는 중앙집권 시스템을 더 원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정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바로 체제를 변환하고 우리가 개입하는 것은 과거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조동호: '담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봤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북한의 입장에서 획기적인 제안들이 있어야 한다. 둘째, 접근방식도 담대해야 한다. 지금처럼 '비핵화를 한다면'이라는 접근은 과거에 해오던 방식이다. 셋째, 제일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 양보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에는 생존이 달린 문제를 남한 입장에서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의 문제로 환치한다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즉, 담대하다고 하려면 우리도 상당 부분 포기 내지 양보하는 것이 있어야 진정성이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는지 빠져 있다. 역대 모든 정부들이 그러해 왔듯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인지가 빠져있는 것이 담대함의 부족함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편, 그간의 대통령의 발언에 자유가 많이 등장해 왔다. 경축사에서도 남북문제, 북핵문제에 '자유'가 등장하였다.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 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 북한 비핵화는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의 언급에서와 같이 '자유'와 '평화'를 연결지었다. 자유와 평화의 선순환 혹은 상관관계가 이론적으로 입증되거나 역사적으로 실현된 경험이 존재하는가?

이상현: 자유와 평화는 정확히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개념 같다. 위 경축사의 문구는 한 문장씩 보면 맞는 이야기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및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자유와 연결시켜 보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맥락을 잘 보면 대통령이 언급하는 자유라는 것이 개인의 freedom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민과 연결되는 걸 봐서 분명히 민주주의나 제도와 관계된 것 같다. 그 말은 즉, 북한도 자유민주화가 돼야 되고 그러면 평화가 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다.

향후 정책방향

조동호: 다양하고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에 정책방향을 제언해 주시기 바란다.

이상현: 대북정책에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를 두어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한 구상'에는 이것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즉, 우리가 이걸 제안하면 북한이 호응하겠지 하는 전제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담대한데 호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구상과 덜 담대한 대신 호응할 가능성이 큰 구상 중 어느 것이 좋은가. 즉,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안을 자위적인 담대함을 위해 던지고 말 것인가, 아니면 덜 담대해 보이더라도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으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담대한 구상'이건 덜 '담대한 구상'이건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실현 가능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다.

북한에 대한 접근이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처럼 지나치게 평화 위주가 되어서도, 예전 보수 정권처럼 안보 위주만 되어서도 안된다. 그 중간지점을 찾아가는 노력, 안보와 평화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내부의 공감대 또한 중요하다. 진보와 보수가 평화냐 전쟁이냐의 이분법적인 틀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양쪽 모두 평화를 위한 것인데 다만 방법론에 차이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며 아우르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번 정부도 우리만 옳다는 태도를 가진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전성훈: 북한은 줄곧 체제 안전보장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와 연결시켜 주장하고 있으나, 적어도 남북관계에서 볼 때 지금 체제 안전 보장을 걱정해야 할 쪽은 북한이 아닌 한국이다. 북한은 절대무기인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철 지난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요구와 논리는 핵개발을 정당화하고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는 북한의 선전논리이고 북한이 씌운 프레임이다. 이것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까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고 있다. 이 논리를 빨리 깨야 한다. 안전보장을 걱정해야 할 쪽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점을 정부 스스로 대내외적으로 알려 북한의 체제 안전 선전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전에 정부 부처 간에 정확히 조율되고 합의된 입장이 도출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조동호: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해야 하는가?

전성훈: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하여 국제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를 운용하고, 핵문제는 별도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비현실적인 북핵 폐기를 실현 가능한 목표로 삼고 있으니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 공격이나 경제 지원 및 제재로는 핵보유국으로 하여금 핵을 폐기하게 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전례가 없다. 핵에 대한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다. 지난 정부에서 정상회담을 세 차례씩이나 하였고 북미정상회담도 이루어진 만큼, 우리도 북한이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직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처능력을 갖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재래식 차원에서, 북한이 100만명 이상의 군대를 보유했지만 우리도 맞대응하여 재래식 전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모색했고 일정한 성과도 거뒀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는 명실상부하게 북핵에 맞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국제적 기준과 상식에 맞게 갖추고 북한을 상대하면 된다. 재래식 대 재래식으로 균형을 맞추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했듯이, 핵 대 핵으로 평화를 유지하며 틈을 찾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 스스로 변화하게끔 해야 한다. 남북간 균형이 맞아야 북한도 남북대화에 임할 것이고, 남북대화를 하게 된다면 핵 관련 남북대화를 해야 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떠한 핵사용 전략을 가지고 있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외부에서 조이면 조일수록 북한의 핵보유 의지는 강해진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우리의 전략을 재수립하는 것이 진정한 '담대한 계획'일 것이다.

이상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고, 북한에 핵포기 의사 및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우리의 장기적 목표(end state)임을 분명히 밝히는 선언적 정책(declaratory policy)이 필요하다. 당장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더라도 남북한 모두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해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다만, 국제협력을 통해 방어체계나 재래식 전력 그리고 핵억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핵무기를 갖고도 살 수 있지만 핵무기 없는 미래를 선택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야 할 것이다.

조동호: 이 소장님은 북한의 호응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민, 평화와 안보의 이분법에서 탈피한 균형잡힌 관점, 이에 대한 내부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지적해 주셨다. 전 교수님은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프레임 타파, 북핵과 남북관계의 분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다.

오늘 중요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업그레이드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상으로 대담을 마치겠다.